“공공기관 개별조직 이해관계, 개혁 가로막아선 안돼”

李대통령 “공공부문 혁신, 시대적 과제”

“불편하더라도 국민·국가 고려해달라”

“법 집행 막으면 특수공무집행방해”

“전세계적 허위사실 유포로 사회갈등”

이재명 대통령은 10일 공공기관 개혁과 관련해 “어떤 경우에도 개별 조직의 이해관계가 국민과 공동체 전체를 위한 개혁을 가로막아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산업구조 대전환과 국토 균형발전이라는 도전에 직면한 지금 공공부문의 혁신은 더는 미룰 수 없는 국가적·시대적 핵심 과제”라며 이같이 당부했다.

이어 “물론 오랫동안 조직과 기능을 바꾸는 것이 쉬운 일만은 아니고, 다양한 의견을 경청하고 조율하는 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난제에 직면할 수도 있다”면서도 “각 조직 구성원은 불편함이 따르겠지만 국민과 국가를 조금만 더 고려해 주시길 부탁드린다”고 강조했다.

또 “각 부·처·청은 각별한 책임 의식을 갖고 소관 공공기관 개혁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며 “개혁의 성패를 좌우하는 핵심은 속도인 만큼 빠른 구조개혁 달성을 위한 획기적인 인센티브도 적극 강구해 달라”고 지시했다.

공공기관 통폐합 및 지방 이전 계획 등을 둘러싸고 일부 반발이 불거지는 가운데 대승적인 협조를 주문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 대통령은 이후 비공개회의에서도 “기관별로 사정은 있겠지만 원칙에 입각해 공공기관 개혁 작업에 속도를 내달라”고 당부했다고 김성완 청와대 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에서 전했다.

이 대통령은 회의에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위협받고 일상이 불안하면 어떤 성장과 번영도 지속될 수 없다”며 “우리 사회 곳곳에 자리한 각종 범죄, 비리, 불공정에 대한 대응에 범정부적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라고도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관계성 범죄, 이상 동기 범죄, 온라인 스캠, 마약, 불법 사금융, 가짜 뉴스, 부동산 불법 행위, 지역 토착 비리 등을 언급하며 “걸리면 패가망신이라는 인식이 자리 잡도록 엄정히 대응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아울러 “문제가 발생한 후 사후약방문식으로 수습하는 데 그치지 말고, 아예 이들 범죄가 우리 사회에 발을 붙일 수조차 없도록 촘촘하고 빈틈없는 대응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며 “관계 당국은 불필요한 칸막이를 허물고 모든 수단을 총동원해 종합대책을 신속히 수립·시행해달라”고 지시했다.

특히 이 대통령은 “우리 국민 대다수는 규칙을 잘 지키는데, 법을 어기면서 이익을 보는 집단들이 있다”며 “예를 들어 법률에 의한 처분이나 집행을 무력으로 저항하는 경우가 있다”고 콕 집어 거론했다.

또 “재개발 명도 집행을 하는데 물리력을 동원해 수년간 버텨 피해를 주고, 소위 알 박기를 한다든지 하는데 결국은 나중에 그게 통하더라”며 “숫자를 동원해 물리력으로 방해한다든지 하면 특수공무집행방해 아니냐. 그런 걸 왜 방치하느냐”고 지적했다.

이어 경찰, 행정안전부, 법무부 등을 향해 “전국에 불법을 지속해 강행하거나 법질서를 부정하는 행위의 실태를 전부 체크해서 보고하라”고 지시했다.

한편, 이 대통령은 비공개회의에서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국정홍보 방안에 대해 보고받은 뒤 “허위 정보는 전 세계가 겪는 문제이자 극단적인 대립을 만드는 요소”라고 지적했다고 김 대변인이 전했다.

이 대통령은 “특히 전 세계적으로 허위 사실 유포로 인해 사회 갈등이 격화되고 있다. 좋은 정보는 적극 알리되 허위 왜곡 정보는 바로잡는 노력이 필요하다”면서 디지털 홍보 강화를 주문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 비판하는 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가 10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규탄사를 통해 국민의힘을 비판하고 있다. /연합뉴스

‘청해부대 작전구역 확대’ 국무회의 의결

‘호르무즈 안정화 기여’ 첫 조치

이재명 대통령이 10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청해부대의 임무 구역 확대 및 추가 자산 파견 등을 내용으로 하는 파견 연장 수정동의안이 의결됐다.

해당 안건은 이 대통령의 재가를 거쳐 국회에 제출돼 입법부의 동의 절차를 밟게 된다.

동의안에는 소말리아 아덴만 해역에서 상선 보호 활동을 하는 청해부대의 임무 구역을 호르무즈 해협과 좀 더 가까운 오만 남쪽 해역까지 확대하는 등의 내용이 담겼다.

기존 전력인 구축함에 더해 해상초계기 1대와 폭발물처리반(EOD), 무인 소해장비 등 추가 전력을 파견하고, ‘국제 해상교통로 상 항행의 자유 회복 지원’을 임무에 추가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EOD 및 무인 소해장비 파견과 ‘항행의 자유 회복 지원’ 임무 추가는 미·이란 종전 이후 시작될 수 있는 국제사회의 호르무즈 해협 기뢰제거 작전 참여 가능성에 대비하려는 목적도 있다.

동의안의 이런 내용을 두고는 호르무즈 해협 안정화를 위한 군사적 노력에 기여하는 첫 사례라는 평가도 나온다. /연합뉴스

김민석 “나라 성장을 국민 모두의 성장으로”

임광현 “당정청, 신뢰하고 긴밀히 소통해야”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대표는 10일 국회를 찾은 임광현 대통령비서실장과 최인호 청와대 정무수석을 만나 당청 관계 발전 방안 등을 논의했다.

임 실장과 최 수석의 취임 인사차 이뤄진 이날 방문에서 김 대표와 임 실장, 최 수석은 당정청 간 협력의 중요성을 한목소리로 강조했다.

김 대표는 우선 임 실장을 향해 “오랜 공직 생활로 행정에 깊은 전문성이 있다”며 “앞으로 국정을 판단하고 조율하는 데 큰 역할을 해주실 것으로 믿는다”고 말했다.

최 수석을 향해서는 “참여정부 청와대부터 우리 당 최고위원과 수석대변인, 국회 국토교통위 간사를 두루 거쳐 풍부한 정무 경험을 쌓았다”며 “대통령과 여야 사이에서 원활한 소통을 이끌 것으로 믿는다”고 했다.

김 대표는 “지금 가장 중요한 국가적 과제는 나라의 성장을 국민 모두의 성장으로 이어가는 일”이라며 “예산, 민생 입법, 사회 개혁까지 당과 청와대가 함께 풀어갈 일이 많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만드는데 두 분과 긴밀하게 호흡을 맞춰가겠다”고 밝혔다.

이에 임 실장은 예산 심의를 언급하며 “내년도 예산안은 국가의 성장을 국민의 성장으로 이어가고 국민의 삶을 실제로 나아지게 하는 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임 실장은 “정부 안에 미처 담기지 못한 현장 목소리와 민생의 어려움이 있다면 국회 심의 과정에서 충분히 반영해 달라”며 “정부도 국회에서 제기되는 의견을 열린 마음으로 듣고 민생에 도움이 되는 대안은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했다.

이어 “국민께서 맡겨 주신 책임을 다하려면 당정청이 서로 신뢰하고 긴밀히 소통해 힘을 모아야 한다”며 “저도 당과 정부, 청와대 사이의 소통이 더욱 촘촘히 이뤄지게 하면서 국민 기대에 부응하도록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최 수석도 “저 역시 당정청이 하나 되고 소통을 강화해 그 성과가 민생과 국정의 성과로 이어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

한병도 “투자자 보호·주식시장 신뢰 회복 앞장”

“국힘, 개미 눈물 정쟁수단으로”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는 10일 변동성이 커진 주식시장과 관련해 “국민의힘은 투자자의 불안을 키우는 행위를 즉각 중단하시라”라고 촉구했다.

한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국민의힘은 개미들의 눈물을 정쟁의 수단으로 쓰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국민의힘 스스로 이번 급락의 원인을 미국발 AI(인공지능) 충격이라고 인정하면서도 모든 책임을 정부에 돌리며 국민연금의 주식 평가액 하락을 확정 손실처럼 말하고 있다”며 “평가액과 확정 손실을 명확히 구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금 가장 경계해야 할 것은 주식 시장에 대한 불신을 조장하며 투자자의 불안을 부추기는 행위”라며 “정치적 이익 때문에 시장의 공포를 부추겨서는 안 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투자자의 보호와 주식시장에 대한 신뢰 회복에 앞장서겠다”며 “국민의힘도 투자자의 불안을 키우는 공포 마케팅을 거두고 시장 안정과 국민 자산을 지키는 데 함께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정부, 순직공무원 예우 확대…재활 통계도 신설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 입법예고

인사혁신처는 순직 공무원에 대한 예우를 확대하고 다친 공무원의 복귀를 지원하기 위한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입법예고는 위험 직무를 수행하다가 사망한 일반직 공무원도 국가유공자법상 ‘순직군경’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공무원 재해보상법을 개정한 데 따른 후속 조치 성격이다.

이에 따라 시행령 개정안을 통해 위험 업무를 수행하다 순직한 공무원의 순직군경 예우 기준·절차를 구체화하고, 다친 공무원의 복귀를 돕기 위한 재활 통계를 신설하는 등 지원체계도 강화했다.

사회적 관심도가 높은 순직 심사 과정에 국민이 참여하는 순직 심의 국민참여제도의 운영 근거도 구체화했으며, 재해보상부담금을 ‘재해예방 및 보상부담금’으로 이름을 바꾸고 활용 범위도 넓혔다.

이번 개정안은 21일까지 국민과 관계기관의 의견을 수렴하는 입법예고 기간을 거쳐 내년 2월 시행 예정이다. /연합뉴스

